

이혼남녀 재산분할 판결 주목

여성 27명 새 가족법따라 소송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에 신설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여성이 27일 현재 1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89~90년에 이혼이 마무리됐거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면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한 여성도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결혼생활중 이혼 재산에 대한 남녀분할비율이 어떻게 판결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여성계가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적용해야 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도 산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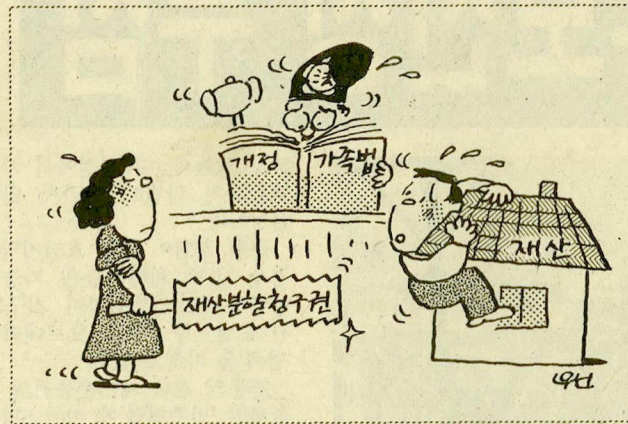
개정가족법 시행 이후 처음 제기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67년 결혼한 주부 이아무개(42·서울 관악구 봉천동)씨가 "남편의 거듭된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지난 2월1일 가정법원에 "봉천동의 건물 2채와 경기도 용인군의 밭 7백여평 등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다.

이 소송과 함께 현재 가정법원에 접수된 17건의 성격은 대부분 이씨의 경우와 비슷비슷해 결혼생활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

만큼 나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가정법원에서도 합리적인 분할비율을 확정짓지 못해 재판은 큰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올들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쇄도, 전담팀 구성 움직임을 보이던 가정법원은 전담팀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소송건을 가사심판합의 2~6부에 배정, 수시로 만나 논의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가사심판합의4부 최창 부장



담당판사 **재산형성 기여정도가 중요 잣대**
법 학 계 **맞벌이·농촌여성 분할몫 높여야**

재판과정서 가사노동의 가치 산출 예상

판사는 "각 소송마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 일률적으로 분할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같이 살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담당 판사들은 가령 △남편은 회사원, 아내는 전업주부이면 50 대 50으로 △남편의 재산이 많으나 아내가 병으로 재산형성

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땐 남편 몫을 많이하고 △아내가 의사이고 남편의 수입이 적은 경우는 아내 몫을 많게 한다는 식으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송이 아직 재판기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바꾼 소송의 첫 선고가 5월말 또는 6월초에 내려질 예정이어서 법학과 여성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가족법의 법안작성에 참여했던 연세대 법학과 김주수 교수는 "남편의 재산정도, 결혼생활기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공정하게 판결, 합리적인 판례를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맞벌이 여성, 농촌여성 등처럼 가사노동에 덧붙여 또다른 일을 하는 여성의 이중노동을 재판과정에서 평가, 분할비율을 높게 책

정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시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3건의 변론을 맡은 김삼화 변호사도 "재판부가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판결에 적용시키는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비슷하면 여성에게 분할 몫을 많이 배정하는 등 여성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주부의 가사 노동을 인정, 미국·프랑스 등은 부부 공유재산을 각각 반씩 나누고, 독일은 별산제와 공유제의 장점을 덧붙인 부가이익공유제를 채택, 이혼 때의 재산에서 결혼할 때의 재산을 제외시켜 반씩 나누어주고 있다. 영국은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채무·결혼기간·나이·건강 등을 고려해 법원이 분할비율을 명령하고 있고, 재산분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공유재산의 20~30%를 주부의 몫으로 상당히 낮게 배정하고 있다.

외대 경제학과 최광 교수는 "외국의 분할비율을 참고로 하되, 결혼생활동안 이혼 재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형평에 맞게 나누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한국여성민우회 김상희 사무국장은 "현재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도피시킨 재산이 있을 경우 추적이 어려워 이혼하는 여성이 제몫만큼 재산을 분할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금융실명제 실시 △합리적 분할방법인 독일식 부가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신연숙 기자〉